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일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및 가계개선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금융·복지 연계 전달체계 파악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고용·주거·복지 등 생활 전반의 곤궁과 결합된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금융과 복지의 연계·통합적 대응이 필요

이에 부채위기, 가계관리 문제를 ‘생활 곤궁’의 요소로 보고 지자체 중심의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와 가계개선 지원사업 사례를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제도 운영 방식과 전달체계를 파악하여 한국의 금융과 복지 연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과제명

[기본26-013-00] 저소득층 부채부담 실태와 복지연계 지원방안 연구

□ 출장기간

2026. 4. 7.(화) ~ 4. 10.(금)

□ 출장국가(도시)

일본(동경)

□ 출장자

이주미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4.07	한국(김포)			오전 출국
	일본(동경)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오후 13:30 도쿄역

			상석연구원	- 일본 금융·복지 정책 동향등 연계 제도 사례 정리 방향 논의
04.08	일본(동경)	나카노구청	모리야마 미카 계장, 키타야마 사회복지사, 신다 마사카즈	오전 10:00 나카노구청 - 일본 취업·주거·복지서비스 및 채무조정 연계 전달체계 및 가계개선 지원사업 및 제도 운영 구조 파악 -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가계 개선 지원 담당 공무원 등 면담
		가와사키시청	나카무라 유타 센터장, 야마나 쇼이치로 계장, 노미조 세이코 계장	오후 14:00 가와사키시청 회의실 - 일본 취업·주거·복지서비스 및 채무조정 연계 전달체계 및 가계개선 지원사업 및 제도 운영 구조 파악 -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가계 개선 지원 담당 공무원 등 면담
04.09	일본(동경)	쇼와여자대학교	이은심교수	오전 10:00 다치카와시역 - 가계개선 지원사업 성과 및 전달체계 개선 방향 및 한국제도 개선방향 관련 전문가 면담
		다치카와시사회복지협의회	하시모토 회장, 오오히라 무히코 사무국장, 야마모토 케이키 과장, 타나카 료히코 계장, 고카와 주임	오후 14:00 다치카와시사회복지협의회 -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운영 구조 파악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위탁기관 역할 분담 관련 실무자 면담
04.10	일본(동경)	메이지가쿠인대학	신보미카 교수, 김원경 교수	오전 10:00 메이지가쿠인대학 연구실 - 제도 도입 배경 및 정책 문제의식 파악을 위한 일본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도입 배경 및 금융·복지 연계 관련 전문가 면담
	한국(청주)			오후 귀국

①	생활근공자자립지원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일 시	2026년 4월 8일(수) 11:00
장 소	(동경) 나카노구청 회의실
참석자	모리야마 미카 계장, 키타야마 사회복지사, 신다 마사카즈(이상 나카노구청 생활지원과), 김명중 상석연구원(닛세이기초연구소),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나카노구 생활지원과(나카노 쿠라시 서포트) 운영 현황

- 나카노구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나카노 쿠라시 서포트」는 생활근공자 자립지원제도에 기반한 종합상담 창구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용·주거·건강·가족 등 생활 전반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본 센터는 상담을 출발점으로 이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중심의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업무
 - (자립상담 및 사례관리) 생활근공자의 초기 상담 및 어세스먼트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함.
 -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 시 방문상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병행함
 - (취업지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연계, 공공고용서비스(헬로워크) 협력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함.
 - 취업 준비 단계부터 노동시장 진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가계개선지원) 가계 수입·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가계표 작성 등을 통해 재정 상태를 '가시화'함.
 - 지출 구조 개선, 체납 해소, 부채 관리 등을 포함한 가계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재정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주거지원) 주거 상실 또는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주거확보급여(임대료 지원) 등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취업지원과 연계하여 주거 유지와 자립 기반 형성을 동시에 지원함.
 - (아동·가족 지원) 생활근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 완화 및 빈곤의 세대 간 전이를 방지함.

2. 상담인력

- 상담 인력은 상근·비상근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9명이 상시 상담 대응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음
- 가계개선지원 업무는 약 1.5명 수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 인력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일부 CFP(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을 보유한 금융전문가로 구성됨

- CFP 자격은 2년마다 갱신이 요구되어, 최신 금융환경과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체 상담 중 약 20% 내외를 차지
 - 코로나19 시기에는 대출 상환 유예 및 면제 신청 지원 등 금융 관련 상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서 작성 지원 등 실무 중심의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3. 지원 흐름 및 사례관리 방식

- 상담 대상자는 주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우 관련 상담 창구의 안내를 통해 유입
- 초기 상담에서는 표준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생활상황, 부채, 취업, 건강,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조사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법률, 가족 갈등, 고립 등)는 추가 상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함.
- 초기 상담 이후에는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취업, 주거, 가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함.
 - 1회 상담 이후 재방문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락을 통해 재상담을 유도하고 있으며, 약 절반 수준이 재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

- 나카노구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가계,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대상자의 우선 필요를 중심으로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 동일 공간에서 관련 부서가 함께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내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달체계 운영의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함.
 -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의료기관, 부동산, 변호사 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지원을 제공함. 필요 시 상담원이 동행하여 연계를 지원함.
 - 주거 불안정 계층의 경우 도쿄도 사업(도쿄 챌린지)과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생활보호제도와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나, 필요시 해당 제도로 연계하고 있음.
 - 지자체 직영과 민간 위탁 방식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관과의 협력 수준에 따라 사업 성과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일 공간에서 운영될 경우 연계가 원활하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 협력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5. 운영 성과 및 사례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단일 서비스로 작동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생활지원의 일부로 기능하며, 장기적인 상담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음.
 - 상담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에는 금융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립 및 외로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

-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6. 정책적 시사점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융상담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상담 체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금융-복지 연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CFP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의 참여가 필요함.
- 일본의 제도는 서구 모델을 기반으로 도입되었으나, 지역 및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함.
 -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안내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생활 전반을 고려한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②	생활곤궁자자립지원 관련 부서 담당자 면담
일 시	2026년 4월 8일(수) 14:00
장 소	가와사키시청 회의실
참석자	나카무라 유타 센터장, 야마나 쇼이치로 계장, 노미조 세이코 계장(가와사키시청 건강복지국 생활보호·자립지원실), 김명중 상석연구원(닛세이기초연구소),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제도 개요 및 운영 구조

- 가와사키시 「다이잡센터」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상담기관으로, 정신·가족·건강·법률·재정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본 센터는 생활보호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생활곤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필요 시 동행 지원을 수행하는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함.
 -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 형태로, 시청 인근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수행되고 있음.
- 상담 인력은 총 3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계개선지원사업 전담 인력은 4명(상담원 3명, 주임 상담원 1명)이며, 나머지는 자립상담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어 연간 약 250명 수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담 인력은 사회복지사, 재무상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약 2~4년 수준으로 나타남.

2. 지원 흐름 및 사례관리 방식

- 상담 대상자는 주로 구청 등 행정기관의 소개, 홍보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유입되며, 다양한 공공기관(사회복지협의회, 헬로워크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초기 상담은 1~1.5시간 수준의 심층 인테이크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활, 취업, 부채, 건강 등 다양한 영

역을 포함한 표준화된 상담 양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문제 진단이 이루어짐.

- 특히 초기 상담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과정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숙련 상담원이 담당하는 등 전문성이 강조됨.
- 상담 이후에는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자립지원 플랜을 수립하며, 약 2개월간의 집중 상담을 거쳐 지원 조정회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사례관리는 대상자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며, 상담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함

3.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

- 본 제도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취업·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운영됨.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지출 관리 및 체납 정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취업지원(수입 증가)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구조임.
- 주요 연계 기관으로는 헬로워크(고용), 공공주택, 부동산, 의료기관, 법률상담소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상담원이 직접 동행하여 지원을 연계함.
 - 특히 채무조정, 세금·공과금 체납, 상속·이혼 등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정보 공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이루어짐.
- 전달체계는 직영과 위탁 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자립상담의 약 70%가 위탁 형태로 운영됨.
 - 직영 방식: 행정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 존재
 - 위탁 방식: 전문성 확보는 용이하나 기관 간 협력 수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한계 존재

4. 운영 성과 및 사례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단순한 부채 해결을 넘어 생활보호제도 진입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사례에서 취업 및 소득 확보를 통해 생활보호 수급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거나, 고령자의 경우 생활보호 진입 시점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확인됨.
- 상담 과정에서 대상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현장에서는 “조기에 상담을 받았을 경우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

5. 정책적 시사점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취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된 통합 사례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출 관리(가계개선)와 소득 확보(취업지원)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요소로 작용함.
- 또한 제도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 간 연결 구조 설계가 중요함.

③	일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면담
일 시	2026년 4월 9일(목) 10:00
장 소	다치카와시역 역사내
참석자	이은심 교수(쇼와여자대학교),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 기본 구조 (중앙-지방-현장): 일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상담·사례관리 체계에, 전문기관과 지역 네트워크가 결합된 다층적 구조
 - 일본의 복지전달체계는 행정기관(복지사무소, 전문 상담소 등)의 공적 책임과 민간(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등)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

① 공공 행정 체계 (국가 및 지자체)

- **중앙정부:** 사회보장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78개소), 지적장애인 갱생상담소(88개소), 아동상담소(240개소), 여성상담지원센터(49개소) 등 전문적인 상담 및 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설계
- **도도부현(광역):** 지방사회복지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도도부현 복지사무소(204개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감독,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장애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를 담당
-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로, 전국에 시 복지사무소(990개소)와 정촌 복지사무소(46개소)가 설치
 - 생활보호,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수행: 전국 총 1,240개소의 복지사무소가 있으며, 생활보호(기초 생활보장) 실시, 특별양호노인홈 및 모자생활지원시설 입소, 보육소 입소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

② 민간 복지 주체 - 지역 기반 인적 네트워크

- 관 주도의 행정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 및 연결 역할을 하는 약 22만 명 규모의 민생위원·아동위원(228,573명)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며, 장애유형별 상담지원 인력(신체장애인 상담원 6,385명, 지적장애인 상담원 3,036명 등)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높은 공공성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엄격한 인가와 감독을 받음
 - 구호시설, 아동양육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등을 운영하는 제1종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소, 재가서비스, 지역자녀양육지원 등을 운영하는 제2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 **사회복지협의회(사협):** 전국(1개소), 도도부현/지정도시(67개소), 시구정촌(1,817개소) 단위로 조직된 민간 비영리 단체
 -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복지활동 계획 수립, 종합 상담, 자원봉사 육성, 재가복지서비스(방문

요양·목욕 등),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 생활복지자금 대출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을 추진

○ 전달체계 특징

- ① 지방정부 중심 운영: 실제 서비스 제공과 집행은 기초자치단체 중심
- ② 기능별 분화된 전문기관: 아동, 장애, 여성 등 대상별 전문기관 분리 운영
- ③ 상담-조사-판정-서비스 연계 구조: 단순 급여 지급이 아니라 상담 기반 사례관리 체계
- ④ 지역 네트워크 활용: 민생위원, NPO 등과 연계하여 비공식 지원까지 포괄

□ 사회복지협의회(社協, 사협)의 역할 및 주요 사업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로, 2025년 4월 기준 전국 단위 1개소, 시도부현 및 지정도시 단위 67개소, 시·구·정·촌 단위 1,798개소가 설치되어 촘촘한 조직망을 갖추고 있음

○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수행역할

- 지역복지활동 계획 수립 및 종합 상담
 -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추진을 위해 지역복지활동계획(地域福祉活動計画)을 수립(79.7%)하며,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생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상담(綜合相談)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82.5%)
- 소지역 기반 네트워크 및 주민 참여 활동
 - 지역 내 요보호 대상자(독거노인 등)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소지역 네트워크 활동(小地域ネットワーク活動)을 전개하고 있음(60.5%)
 - 주민 간 교류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후레아이·이키이키 살롱(ふれあい・いきいきサロン)을 설치·운영하고 있음(89.5%)
- 자원봉사 육성 및 당사자 조직 지원
 -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기능(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機能)을 수행하며 지역 내 복지교육 및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90.1%)
 - 또한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히키코모리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당사자·가족 모임 조직 및 운영 지원(当事者団体の組織化・運営支援)을 수행
- 재가복지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택복지서비스(在宅福祉サービス)를 제공하며, 방문요양(訪問介護), 주야간보호(通所介護/デイサービス), 식사지원·이동지원(食事サービス・移動サービス) 등을 포함
 - 아동 대상 방과후 아동클럽(放課後児童クラブ) 등 돌봄·보육 지원 사업도 병행
-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
 - 판단능력이 제한된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을 운영함. 주요 내용은 예금 인출, 금전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절차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 및 권리보호를 지원
- 광역-기초 협력 기반 운영 구조
 -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都道府県社会福祉協議会)가 실시 주체이며,
 -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市区町村社会福祉協議会)가 창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복지서비스 이용 지원(福祉サービス利用援助事業) 48.9%, 법인후견사업(法人後見事業) 36.7%)

- 생활복지자금 대출 제도

-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生活福祉資金貸付制度)는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세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

④	생활근공자자립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담당자 면담
일 시	2026년 4월 9일(목) 14:00
장 소	社会福祉法人 立川市社会福祉協議会(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2층 회의실
참석자	하시모토 회장, 오오히라 무히코 사무국장, 야마모토 케이키 과장, 타나카 료히코 계장, 고카와 주임(타치카와시 생활일 서포트 센터(立川市くらし・しごとサポートセンター)), 이은심 교수(쇼와여자대학교),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관 및 지역 개요

- 다치카와시는 도쿄도 다마 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인구는 약 18만 7천 명, 세대 수는 약 9만 8천 세대, 65세 이상 인구는 약 4만 6천 명으로, 고령화율은 24.77%(2023년 기준)
- 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
 - 다치카와 사협은 주민 복지 활동 추진, 상담 지원, 권리 옹호, 조사 및 소셜 액션, 재난 시 지원, 지역 복지 자원 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생활 권역별 센터 배치: 인구 18만 7천 명을 6개의 생활 권역으로 나누어 6곳의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배치. 이 권역은 지역 민생위원회의의 담당 구역과 일치하여 지역 복지 추진 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
 - 상담 창구 강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복지상담센터(브랜치 센터) 3곳을 추가로 증설했으며, 각 지구마다 '지역복지 코디네이터'를 2명씩 배치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
 - 조직 구성: 총무과, 지역활동추진과, 재택지원사업과, 종합상담지원과 등 세분화된 부서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을 다각도로 지원
- 포괄적 상담 지원 (칸막이 없는 복지): 다치카와 사협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 제도의 틈새에 놓인 복합적 과제를 포괄적(마루고토)으로 지원
- 생활 빈곤 세대 대응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표면화된 다양한 생활 빈곤 세대를 위해 긴급 소액 자금 및 주거 확보 급여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사후 상황을 확인. 이후 2022년도부터 부서 간 연계 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 가능 세대, 법률 상담이 필요한 세대, 생활보호 제도 연결이 필요한 세대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계 지원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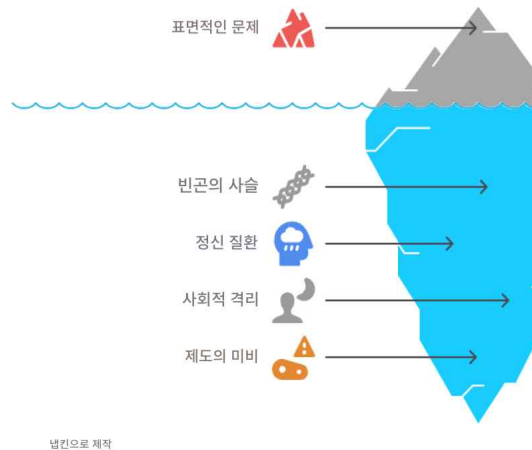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 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활근공자 자립지원제도 내 자립상담지원사업 및 가계개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기관은 생활근공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상담 창구로서, 생활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수하고 이

를 평가(アセスメント)하여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

- 자립상담지원사업은 제도 도입 시점인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가계개선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됨
- 2025년 기준 총 상담 건수는 2,657건이며, 이 중 자립상담지원사업 플랜은 193건, 가계개선지원사업 플랜은 29건으로 나타남
- 생활곤궁 상담 사례 중 약 50~70%에서 가계부채, 공과금 체납, 임대료 체납 등 금전 문제가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이용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자영업자·휴직자 등이며, 가계 수지에 대한 이해 부족, 다중 채무 및 체납, 건강 및 가족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음
 - 특히 가계문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생활곤궁의 일부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생활곤궁자 지원에서의 빙산모델(冰山モデル)
- 생활곤궁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소득 부족’, ‘부채’, ‘지원 미신청’ 등 표면적 문제로 나타나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함.
 - 이는 부채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생활곤궁의 일부로 인식하고, 금융·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 빙산모델에 따르면,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 이면에는 취업 불안정, 가족관계 악화, 건강 문제, 정신건강 저하, 사회적 고립, 제도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
 -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생활곤궁자 지원은 표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구조적·복합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
 - 특히 상담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고용·주거·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함

생활 곤궁자 지원에서 빙산 모델의 중요성



2. 지원 흐름 및 사례관리 방식

- 상담 대상자는 시청 부서(복지, 세무, 주거 등) 및 지역 유관기관(의료기관,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의 소개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직접 방문도 일부 존재함
- 초기 상담에서는 상담원이 면담을 통해 생활상황, 소득·지출, 부채 및 체납 여부, 취업상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표준화된 어세스먼트 시트를 활용함
- 필요 시 가계표 작성, 통장 및 청구서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하며, 상담 과정에서 신뢰관계 형성을 중시함

□ 지원 과정은 초기 상담 → 어세스먼트 → 지원계획 수립 → 사례회의 → 지속지원 → 종료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실제로는 계획 수립 이전부터 지원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음

○ 가계개선지원은 '가계현황 가시화 → 지출 구조 개선 → 체납 및 부채 정리 → 재발 방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가계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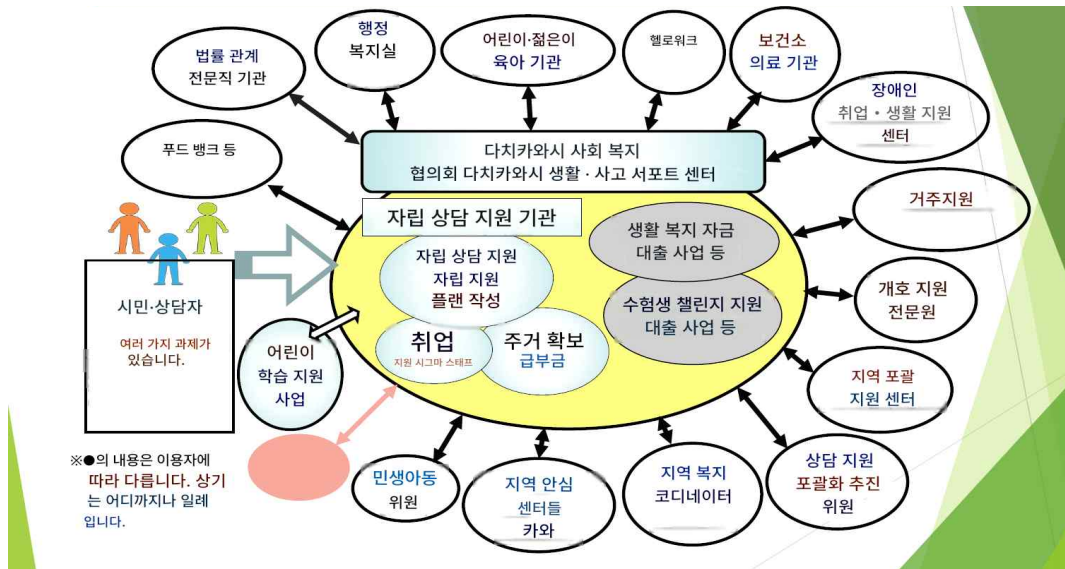


3.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

□ 상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요 문제는 취업 불안정, 건강 문제, 주거 불안, 가족 갈등 등으로, 대부분 복합적 형태를 보임

○ 이에 따라 취업지원기관, 주거지원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짐

-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적성 평가, 취업 알선, 면접 준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과정 중 발생하는 생활 문제는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함
- 주거지원은 거주지원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되며, 물리적 주거 확보는 외부기관이 담당하고, 본 기관은 재정계획 및 생활안정 지원을 담당함
- 생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정보 공유 및 동행 지원을 통해 제도 신청을 지원함



○ 또한 시와 정기적으로(월 1회)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례 공유 및 역할 분담을 수행하고 있음

4. 운영 방식의 특징

- 위탁 방식은 지역연계와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나, 역할 조정과 인력·전문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나타남
- 사회복지협의회 위탁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종합상담 기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생활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음
 - 생활복지자금 등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지원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 내 주민, NPO,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
 - 푸드뱅크 등 제도 외 자원을 활용한 유연한 지원이 가능함
- 반면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
 - 행정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사업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운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담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여 서비스의 질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5. 주요 사례 및 성과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단순한 부채 해결을 넘어 생활 전반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확인됨
 - 가계 가시화를 통해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채납을 해소한 사례
 - 취업 연계를 통해 소득을 안정화하고 교육비 문제를 해결한 사례
 - 법률지원 및 취업지원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한 사례
 - 주거 이전 및 취업을 통해 생활 수준을 안정화한 사례
 - 또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인식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나타남
 - 다만 상담자의 의지 부족, 장기적 개입 필요, 복합문제 지속 등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제한되는 사례도 존재함
 - 사례 분석 예시) 청년 여성의 복합적 생활곤궁 문제
 - 2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한 이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사에 종사해 온 사례임
 - 본인은 취업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와 사회경험 부족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즉각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
 - 주요 문제 특성: 본 사례는 단일 문제가 아닌 다음과 같은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
 - 건강 문제: 정신건강 및 체력에 대한 불안 존재
 -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 연계, 지역 상담기관과 연결하여 안정적 지원 환경 구축

- 취업 문제: 취업 의지는 있으나 준비 부족
 - 청년지원기관 및 장애인 취업지원기관 연계, 개인 의사와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 계획 수립
 - 사회참여 제한: 사회 경험 부족으로 즉시 취업 곤란
 -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점진적 사회적 관계 회복 유도
 - 가계 문제: 경제적 불안정성 존재
 - 가계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수입·지출 구조 정리, 생활 안정 기반 마련
- 즉, 고용·건강·사회참여·가계 문제가 결합된 전형적인 생활곤궁 사례임
- 따라서 지원은 단기적 취업 중심 접근이 아니라, 건강-사회참여-고용-가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적·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6. 정책적 시사점

- 생활 전체를 보는 통합적 지원 관점 확립 필요
 -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거·건강 등과 결합된 생활곤궁 문제로 나타나므로, 금융과 복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
 - 생활곤궁 문제는 부채, 소득, 건강, 가족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단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초기 상담 단계에서 가계상황을 포함한 종합적 문제 진단과 통합적 지원이 필수적임
- ‘연계’에서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 단순히 금융기관이나 채무조정기관을 안내하는 수준의 연계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복지-고용을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채무조정 이후에도 생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부채 위험이 높으므로,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구조 설계가 필요
- 전문 인력의 역할 재정립
 -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며 전체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형·통합형 전문성(코디네이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는 단순 상담 능력을 넘어, 사례관리 및 협업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포함함
- 기관 간 협력의 실질화
 - 제도 간 연계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얼굴이 보이는 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정기적 협의체 운영, 공동 사례 공유, 공동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구조가 필요함.
- 법률-복지 연계 체계 구축
 -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과 복지적 지원이 병행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법률적 해결 이후에도 생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⑤	일본 생활근공자자립지원제도 관련 전문가 면담
일 시	2026년 4월 10일(금) 10:00
장 소	메이지가쿠인대학교 본관7층(10714호)
참석자	신보미카 교수, 김원경 교수(이상 메이지가쿠인대학교), 이주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 문제 인식 및 제도 도입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리먼 쇼크)를 계기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상실하는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기존에는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근로연령층에서도 주거 상실 및 무직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생활근공 문제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됨 ○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도쿄 히비야 공원에 설치된 ‘연말 파견촌(年越し派遣村)’임 □ 당시 민간단체는 주거를 상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 제공, 식사 지원, 취업 상담, 생활보호 상담, 긴급 소액대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정부 역시 일부 기간 동안 공공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같은 상황은 TV 및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면서,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생활근공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됨 <p>2. 생활근공자자립지원 제도 설계 및 가계개선지원사업 도입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활근공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구직자지원제도, 주거확보급여(구 주택수당), 생활복지자금 대부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지원제도는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에게 직업훈련과 함께 생활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주거확보급여는 주거 상실 또는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임. ○ 또한 생활복지자금 대부는 실업 등으로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자금 대출과 함께 사회 복지협의회 및 고용기관(헬로워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됨 □ 기존 정책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중채무 상태에 있거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속에서 부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존재함이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즉각적인 금전 지원이 없다면 상담이 필요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생활근공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지원체계에 진입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하는 문제가 나타남. ○ 또한 신용카드 등 비가시적 금융(‘보이지 않는 돈’)의 확산으로 인해 가계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부각됨. □ 정책 접근 방식의 구조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정부의 정책은 조건부 현금급여(구직자지원제도)와 대출 중심(생활복지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이는 단기적 위기 대응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생활 안정에는 한계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채무 문제는 법률지원(법테라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생활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즉, 기존 정책은 “자금 지원 또는 채무 정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사업 구성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는 상담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로 구성

- ① 자립상담지원사업, ② 취업지원 관련 사업, ③ 주거지원 사업, ④ 가계개선지원사업, ⑤ 긴급·일시 생활지원, ⑥ 아동·가족 지원 등

○ 가계개선지원사업 도입 필요성 제기

- 기존 제도 하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가계상황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가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태였음.

- 이에 따라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가계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상담 기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계개선지원사업의 형성 과정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후쿠오카 지역의 민간조직(그린코프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가계재생 상담실’의 실천 사례를 기반으로 모델화됨.

- 이후 해당 모델이 제도화되면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내 임의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가계관리 지원을 통한 생활 재건 기능을 담당하게 됨.

3. 가계개선지원사업의 역할 및 기능

□ 제도적 위치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내 임의사업이나, **2025년 기준 약 90%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또한 생활보호제도에서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계개선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4년 제도 개정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생활보호 수급자가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가계개선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강화됨.

□ 금전관리지원과의 구분

○ 생활보호 영역에서는 기존에 ‘금전관리지원’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수급자의 금전 사용을 관리·통제하는 성격이 강한 지원임

- 해당 지원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행정기관이 직접 금전관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적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의 결과임.

○ 그러나 금전관리지원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일정 부분 ‘통제적 개입’이라는 한계를 가짐.

- 이와 달리 가계개선지원사업은 금전관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지원으로, 단순한 관리·통제

가 아닌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초점을 둬.

□ 가계개선지원사업의 핵심 내용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상담자가 대상자의 가계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곤궁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원으로 평가
- 지원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면서, 가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단순히 지출을 줄이거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특징임.

□ 정책적 의의

- 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 월별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소비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음.
 - 이에 따라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
- 이는 생활곤궁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사례를 통한 특징: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생활 맥락을 고려한 재정관리 지원이라는 특징을 보임.
 - 사례1: 반려동물 유지비로 인해 생활비 부족이 발생한 고령자 → 생활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재정 조정 필요
 - 사례2: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소비로 인해 지출이 증가한 고령자 → 고립 방지와 재정 안정 간 균형 필요
 - 사례3: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생활보호 가구 출신 대학생 → 교육 유지와 생계 부담 간 조정 필요

4. 전달체계 및 운영상의 특징

- 일본의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는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운영방식이 일률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지역별 재정여건, 인력구조, 민간자원 수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제도의 운영은 획일적 방식보다는 지자체 상황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
-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담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사례가 많아 고용 안정성과 처우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또한 타 업무와의 겸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 축적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인력 전문성과 안정성의 중요성

-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는 ‘사람이 사람을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제도로, 상담 인력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 축적이 핵심적인 요소임.
-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낮은 이직률을 유지하여, 상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남.

□ 공공의 책임성 확보 필요

- 운영 방식과 관계없이 제도의 궁극적인 책임은 도도부현 및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며, 공공의 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보호 등 타 업무와 겸무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남.
- 또한 단기적 인사이동으로 인해 경험 축적이 어려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이 약화되는 한계가 존재함.

5. 정책적 시사점

- 일본에서는 부채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법률지원(법테라스), 변호사·사법서사 연계, 생활복지자금 대부 등 법률적·금융적 지원과 복지적 대출을 중심으로 대응해 옴.

□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

- 2008년 이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채무조정이나 대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 특히 생활곤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제도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하는 등, 제도 접근성의 한계가 나타남.

□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에 대한 사회적 낙인(스티그마)이 강하게 존재하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 또한 지원 과정에서 상담자의 접근이 ‘지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계개선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계를 재검토하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됨.
 - 이는 단순한 금전 관리나 지출 통제가 아니라, 대상자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생활 전반을 재구성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제도 운영상의 주요 과제

- 가계개선지원사업은 금전관리나 지출통제 중심의 ‘지도’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남.
 - 특히 지원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지도적 개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지원 철학: ‘지원’과 ‘지도’의 구분 필요

- 가계개선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도'가 아닌 '지원'에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체적 선택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접근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방지,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됨.

□ 정책적 함의

- 생활곤궁자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심'과 '존엄성 유지'라는 원칙을 실제 정책과 서비스 과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일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에서 강조하는 '생활곤궁자의 존엄 유지'라는 이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됨.
- 가계개선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 구축이 요구
 - 또한 제도 내 다양한 사업 간 연계가 중요하며, 단일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 지원 구조로 운영되어야 함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

① 나카노구청 방문

(일시: 4/8(수) 11:00~12:30)



② 카와사키시청 방문

(일시: 4/8(수) 14:00~16:00)



④ 다치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방문

(일시: 4/9(목) 14:00~17:00)



⑤ 메이지가쿠인대학교 방문

(일시: 4/10(금) 10:00~12:00)

